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

# 주요 업무 보고

2021. 4.

민생사법경찰단

# I . 일반 현황

## □ 법적 근거 :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설치 운영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제6조)
  -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제12조)

## □ 설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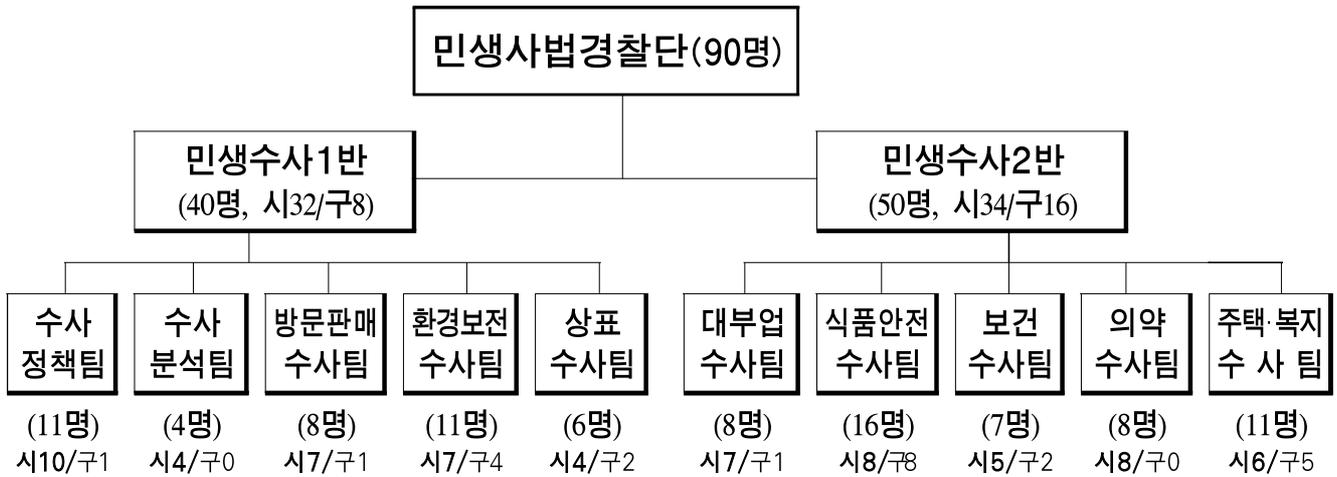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1과 2팀, 25개 지원반)
- '15.11.12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행정국 내 1단·2반·8팀)
- '16.02.04 : 1부시장 직속 '복수직급(3·4급)' 조직 독립(1단·2반·8팀)

## □ 수사 분야·성과 : 16개 분야, 71개 법률 위반 수사('21.3월말 현재)

- 분야 : '식품·공중위생·환경·의약 등' 출발 ⇒ '상표·대부·다단계·부동산 등' 확대
- 성과 : 190명 입건('08년말) ⇒ 15,452명 입건('21.3월말) ※ 51명 구속

운영 기간 ('08.1~'21.3)	특별사법경찰지원과 ('08.1월 : '과' 단위 출범)	민생사법경찰단 ('16.2월 : '국' 단위 승격)	민생사법경찰단 ( '21.3월말 현재)
수사 분야(누계)	○ 6개 분야, 41개 법률 (식품·공중위생·환경 등)	○ 12개 분야, 56개 법률 (+상표, 대부·다단계, 의료기기 등)	○ 16개 분야, 71개 법률 (+사회복지, 부동산, 의료 등)
입건/구속(누계)	○ 160건, 190명 입건 ○ 구속 없음 ('08년말)	○ 9,081건, 10,143명 입건 ○ 구속 22건, 27명 ('16년말)	○ 13,621건, 15,452명 입건 ○ 구속 43건, 51명 ('21.3월말)

**조 직 : 1단 2반 10팀** ('21.4.20. 현재)



**인 력 : 90명** (시 66명, 자치구 24명)

〈 서울시 〉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 직 군						기술 직 군 (관리운영 포함)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5급	6급	7급이하	6급
정 원	69	37	1	2	8	14	12	31	9	17	5	1
현 원	66	34	-	2	7	13	12	32	8	16	8	-

〈 자치구 〉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 직 군				기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현 원	24	22	13	7	2	2	0	2	0	

**2021년 예산 : 1,248,20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20 예산		2021 예산	최종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2021년 예산	1,555,785	1,540,785	1,248,207	△292,578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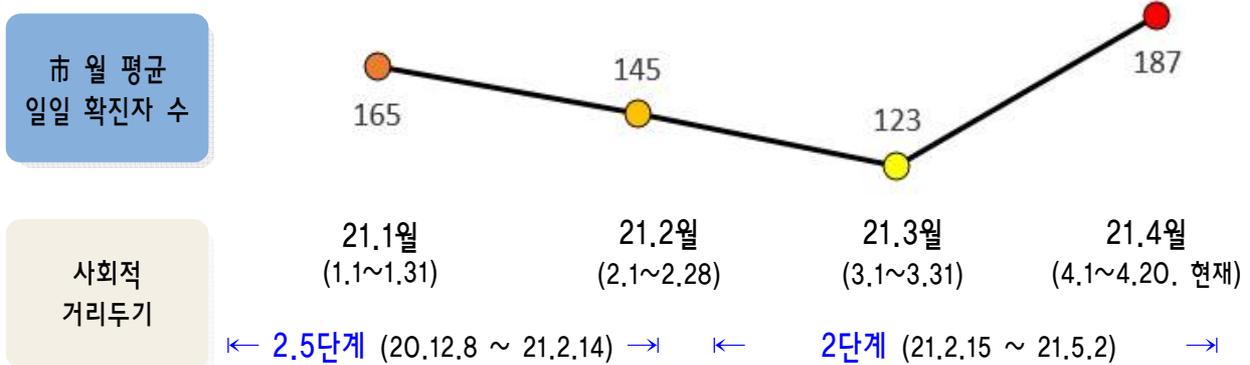
## II. 정책 환경 및 여건 분석

### □ 민생침해 범죄 지속 발생, 시민 피해 우려

-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 필요
  - 위조상품 유통, 불법 대부 근절 TF, 가상화폐 악용 다단계 수사 등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 필요
  - 청약통장 불법 거래,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 거래 중점 수사 등
- **식품·환경 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 필요
  - 원산지 거짓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무장병원 및 불법 의약품 판매 등

### □ 코로나19 최근 확진자 지속적 증가

- 우리시 월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 '21년 시 민원 접수 창구 「응답소」 **방역수칙 위반 지속 신고 : 총 715건**
  - 유흥시설 5종 등 153, 노래연습장 179, 일반음식점 등 383 ('21.4.20. 현재)
-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필요
  - 방역수칙 위반업소 신속대응 체계 가동,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등 중점

### III. 주요 현안

---

1.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
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
3. **식품·환경·보건 범죄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
4.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신속대응**
5.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진행 상황**
6. **자치경찰과 특사경 업무 협조 추진**

# 1

##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사전예방

- ◆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TF 수사, 가상화폐 투자를 악용한 다단계 범죄 수사로 시민 피해 방지

### □ 위조상품 유통·판매 수사 강화

- 가짜 명품 의류·가방 등 온라인 위조상품 : 20명 입건
  - 인터넷 구매 후기 모니터링 ⇒ 은밀·위법한 유통 적발
  -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수사력 집중
- 유명 스포츠 의류 등 오프라인 위조상품 : 21명 입건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위조상품 대상
  - 동대문·남대문 등 대형상가 판매업자 수사 단속 활동 전개



### □ 민·관 합동 TF 불법 대부업 수사 : 21명 입건

- 합동 TF : 市 공정경제담당관·자치구,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 수사대상 : 미등록 대부영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사례 등 중점
  - 市 신고창구(응답소·눈물그만상담센터 등) 피해사례 중점 분석하여 철저 수사

### □ 사행성·투기성 금전거래 불법 다단계업체 수사

- 가상화폐 투자 사칭 불법 다단계 수사
  - 인터넷, SNS를 통해 퍼지는 '투자' 정보 상시 모니터링
  - 불법다단계 포털 카페 등을 통해 피해사례 분석·활용



⇒ 서울시, 암호화폐 광풍 이용한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보 발령 ('21.4.22. 보도자료)

#### 작성자

민생수사1반장 : 최한철 ☎ 2133-8805	상포수사팀장 : 이은웅 ☎8910	담당 : 유재영 ☎8913
민생수사2반장 : 박병현 ☎ 2133-8807	대부업수사팀장 : 김종운 ☎8890	담당 : 권유안 ☎8955
민생수사1반장 : 최한철 ☎ 2133-8805	방문판매수사팀장 : 이준영 ☎8930	담당 : 이범일 ☎8938

# 2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거래 집중 수사

◆ 청약통장 불법 거래, 집값담합 등 중점 수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

### □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수사 : 2명 구속 ('21.4월)

- 청약통장 13건 거래 불법 알선 및 도피 혐의 브로커 2명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한국부동산원 합동 점검·수사 지속
  -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결혼 등 부정청약 행위 중점



### □ 주택가격 왜곡 집값담합 행위 중점 수사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
  -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대상물 표시 강요 등
- 입주민 등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집값담합 행위 수사 방법 : 유관기관 협업 추진 >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등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대상 발굴



### ⇒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21.2.18.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 집값 담합맨 압수수색... 칼 빼든 서울시

국토부와 공조 대대적 기획조사... 시장교란 수사 강화  
불법 청약도 강력형 등 처벌 강화... "사건 적극 제보율"

“온라인에서 유선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거래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수사에 열망 분위가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값 담합과 불법행위 거래를 집중행위해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인 호기 추구가능 등 이상 교란행위 혐의자는 중기 수급을 위한 개인 청약신청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또 집값담합에 따라 판매 단계를 저해도 받을 수 있다.

“국가담합, 부정청약 및 불법 청약행위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입주민은 수도권에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

**서울시-국토교통부 부동산 기획조사 내용**

1. 불법 청약: 청약신청 접수일 이후에 청약신청서 제출

2. 불법 담합: 청약신청 접수일 이후에 청약신청서 제출

3. 불법 청약: 청약신청 접수일 이후에 청약신청서 제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스타킹을 할 때도 스타킹을 풀지 않는 등, 위장 전입·결혼 등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값 담합과 불법행위 거래를 집중행위해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인 호기 추구가능 등 이상 교란행위 혐의자는 중기 수급을 위한 개인 청약신청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또 집값담합에 따라 판매 단계를 저해도 받을 수 있다.

“국가담합, 부정청약 및 불법 청약행위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입주민은 수도권에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

○ 집값 담합 확인 및 청약행 처벌·회근 국산인 입주민은 불법행위 등 기여한 유관으로 79억,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34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대부분 불응하여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제 개정돼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부정청약과 위장 전입·결혼 등 부정행위 행위는 국산 이하 2억에 달하는 3000명 이하 발급이,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는 1300 이하 2억 또는 1000명 이하 발급이 부과된다.

입주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동산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시 권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줄 것이다.

공정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조성과 불법행위 등 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중점 수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편한 신고, 국민 입산단체 등을 제출해 행위자 등을 처벌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아시아투데이

#### 서울시 부동산 교란 행위 차단 국토부 협력, 부정청약 등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거나 청약행위와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불법 청약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공조해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담합수사 대상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담합, 청약이익을 이용한 중개사 양도방매, 인터넷을 이용한 가격 교란, 특정 단체 구성원 외 중개·계약,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최근 청약통장 압수 또는 자기대출 양도 후 청약한 자, 청약통장 양도-양수 일선자, 전 매입한 기간 내 청약권 해제와 판매 일선행 등에 부정행위를 노리는 청약권 불법 침해 행위 등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발의 예정이다.

경찰인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조성과 불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단속·중점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해정희 기자 qanw@7894



작 성 자

민생수사2반장 : 박병현 ☎ 2133-8807 주택·복지수사팀장 : 한창욱 ☎8894 담당 : 최기연 ☎8981

### 3

## 식품 · 환경 · 보건 범죱 수사로 시민 건강 확보

- ◆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사무장병원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수사 등을 통한 시민 건강 확보

#### □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 4명 입건

-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제조·유통·판매 행위
  - 국내 고춧가루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비대면 판매 증가 영향
- 원산지 검사 결과 : '중국산' 이거나 '국산'과 혼합 확인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집중 수사 : 32명 입건

-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높은 배출사업장 중점
  - 대상 : 도금·도장업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업체 등
  - 수사 : 방지시설 미가동, 미인증 보일러 설치 행위 중점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21.3.23. 보도자료) 미세먼지 원인 (서울연구원, 2019)

#### □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 3명 검찰 송치('21. 4월)

- 한의사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하고, 한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약제 제조·판매
  - 사무장병원 : 의사가 아닌 자가 명의 대여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행위
  - 수익만을 목적으로 영업 : 의료질서 훼손,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요 원인
- 협업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팀 간담회('21.3월) 등 정보 공유

####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수사 : 4명 입건

- 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 진료·처방 없이 한방 의약품 판매

작성 자	민생수사2반장 : 박병현 ☎ 2133-8807	식품안전수사팀장 : 이철명 ☎ 8832	담당 : 박혜성 ☎ 8834
	민생수사1반장 : 최한철 ☎ 2133-8805	환경보전수사팀장 : 유영애 ☎ 8870	담당 : 이주영 ☎ 8898
	민생수사2반장 : 박병현 ☎ 2133-8807	보건수사팀장 : 한명숙 ☎ 8850	담당 : 홍기정 ☎ 8970
	민생수사2반장 : 박병현 ☎ 2133-8807	의약수사팀장 : 민규리 ☎ 8942	담당 : 김동철 ☎ 8858

## 4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신속대응

- ◆ 점검 실적 : 715개소 (응답소 방역수칙 위반 민원 '21.1.15.~4.20. 분석결과)
  - ▶ (업종별) 유흥시설 5종 등 153, 일반음식점 등 383, 노래연습장 179

### □ 신속대응팀 운영 개요

- 운영 인력 : 민사단 내 6개팀, 55명 ⇒ 권역별 책임제 신속대응 추진
- 운영 방법 : 방역수칙 위반 신고업소 안내문 전달, 계도, 위법 행위 채증 등

### □ 신속대응팀 운영 실적 : 715개소 점검·계도

- 점검 결과 : 대부분 업소 방역수칙 준수 약속, 일부 업소 위반사실 부인
    - 중복민원, 집단감염 발생 우려 업체는 즉시 계도를 통해 영업주 주의 환기
    - 점검업주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손실 등 애로사항 호소
  - 수사 실적 :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단감염 발생 헌팅포차(1명 입건, '21.2월)
    - 헌팅포차 집단감염(51명) 발생 ⇨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수사 착수
-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즉시 계도 및 엄정한 수사로 사회적 경각심 환기에 주력

### □ 향후 계획 : 최근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밀집지역 집중 점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협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조치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서울시에서는 3,8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국 1일 확진자가 7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영업형태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귀 영업장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미준수로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영업시간 준수, 방문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여 다시 예전과 같은 경제활동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 5

#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진행 상황

◆ 감염병예방법 위반범죄 대응 목표로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권 확보 추진

### □ 수사권 확보 추진 국회 입법 진행 상황

- 추진 개요 : 市 건의('20.8.11) ⇒ 의원입법 발의로 **법사위 계류** 중('20.9.7~)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 '20.9.3, 의안번호 3500
  - 감염병예방법상 “조사·단속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범죄 수사권 부여
- 확보 노력 : 중앙부처·국회·시도지사협의회에 **법 개정 협조 요청**
  - '21.1월 : 보건복지부, 국회(법사위·보복위), 시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등
  - '21.3월 : 국회 법사위(**백혜련 의원, 김도읍 의원**) 보좌관 면담(개정안 통과 협조)
  - '21.3월 :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윤준병 의원**) 면담(개정안 통과 협조)
- 국회 입장 : 특사경 수사권 확대하는 동(同) 법안을 **신중히 검토**
  - 특사경 수사권 확대 외에 검찰과 경찰 수사 조직 활용 방안 검토 등

### ◆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필요성

- ▶ 감염병예방법 **특사경 수사권 극히 제한적** ⇒ **효과적 대응 곤란**
  - 특사경으로 지명된 ① **방역관** ② **역학조사관** 한해 수사권 부여 ※ **현재 市 2명**
  - **단속·행정처분**은 행정기관(市·자치구), **수사**는 일반경찰이 각자 수행

### □ 향후 계획 : 국회 방문·자료 제출 등 지속 추진 ⇒ 조속한 개정 요청

-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윤한홍, 윤영석** 등) 통한 개정안 필요성 설명 등 병행

# 6

## 자치경찰과 특사경 업무 협조 추진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21.7.1.) 시 특사경과 업무 협조 추진 검토

### □ 자치경찰 사무 개요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 일반 사무(생활안전·교통·행사 및 안전 관리) :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 수사 사무(학교·가정·성 폭력, 교통 경범죄 등) : 국가수사본부 지휘·감독

### □ 자치경찰제 시행 시 특사경과 관계 : 상호독립적으로 사무 수행

- 자치경찰과 특사경은 ① 수사권 범위, ② 수사지휘권자가 상이하므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특사경 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구분		자치경찰	특사경(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사무	학교·가정·성 폭력 범죄 등	식품·대부·다단계 등 71개 법률 위반 범죄
	지휘	국가수사본부장	검사

- 자치경찰 : 학교·가정·성 폭력, 교통 경범죄 등 치안 영역 수사
- 특 사 경 :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법률 위반 범죄 수사

- 단, 수사사무 수행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향후 협업 분야 검토 필요

### □ 자치경찰과 특사경 간 협조 추진 검토

- 코로나19 합동단속 : 방역수칙 위반 의심 업소 대상 계도 활동 등 전개
- 청소년 보호 활동 : 자치경찰 순찰·계도 + 민사단 청소년보호법 수사
- 공동 교육 훈련 :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 전문교육기관 활용
  - 실무 중점 : 각종 영장 신청서 작성 및 집행, 잠복·추적 등 현장 활동 요령 등